

## 한국에서 진보/보수 논쟁과 사회갈등의 상관관계

— 정치과잉화된 갈등사회에서 다원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탐색 —

김태근\* · 이영란\*\*

### • 요 약 •

근대사회에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갈등요소가 존재하지만 세계화 이후 서구국가들의 이념적 갈등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이념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배경을 추적한다. 유럽사회에서는 역사적으로 다른 영역과 분리된 정치가 좌파와 우파로 구분되면서 출발하지만, 경쟁과 함께 타협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인해 이념적 차이점을 줄일 수 있었다. 복지국가와 함께 68운동과 1980년대의 개인화현상은 이런 흐름을 더욱 구체화하였고 정치와 분리된 다양한 영역들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사회는 우파 내에서 나뉜 진보와 보수가 정치적으로 대결하면서 다른 영역들의 자유로운 논의를 방해한다. 다시 말해 서로 정치적 우위에 설려는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에 의해 한쪽에서는 정치과잉화되고 다른 쪽에서는 정치를 혐오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먼저 진보와 보수의 구분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정치가 다른 영역들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무엇보다 개인의 자기성찰과 비판의식이라는 근대의 기본정신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제어 : 보수/진보 논쟁, 정치과잉화, 사회갈등, 다원화 사회, 근대성

## I. 들어가며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은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냉전시대의 종식을 알렸다. 그리하여 1980년대 초 서구사회

\* 영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제1저자)

\*\*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2저자)

에 이미 나타났던 이념적 대립의 약화는 지구화의 흐름과 함께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미국에서 시작하여 영국으로 건너간 이념적 대결과 갈등의 약화는 토니 블레어에 의해 제창되고 앤서니 기든스가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제3의 길’로 구체화되었다. 독일에서도 미국과 영국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여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부에 의해 ‘새로운 중도’(Die Neue Mitte)의 정책적 기조로 나타났다. 과거의 이론적 틀에서 벗어나 개혁적이고 실용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대세를 형성한 것이다. 하지만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사회는 예외였다. 형식적으로는 사회주의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조국가의 형태를 띠는 북한은 한국사회가 이념적 갈등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만드는 결정적 환경이다. 그런 외부 요소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국사회의 이념적 대결과 갈등의 강도는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그런 한국적 특징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추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에서 기획되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원인을 보수와 진보의 개념으로 둘러싼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대립에서 찾았다.

통상적으로 좌파와 우파의 이념적 구분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객관적 기원에서 비롯된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서구 역사는 노동자 및 그들의 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좌파와 자본가 및 시장을 강조하는 우파가 지난한 경쟁과 대결로 혼란의 시기를 거쳤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본주의 경제질서 내에서 타협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찾아나갔다. 각각의 세력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도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서구사회는 단순히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좌파와 우파로 구별하는 것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관심의 폭을 넓혀나갔다. 즉 정치영역과는 다른 구분기준,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가치에 따라 경쟁과 대립의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따라서 획일적이고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라 다양한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사회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요소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을 둘러싸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기준, 경제적 이해관계, 환경적 대응방식, 민족문제와 북한과의 관계, 혹은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감정적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개별 영역마다 각각의 논의에 근거하여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 것이 순리이지만 현재 한국사회에는 진보와 보수의 단순하고 획일적인 구분이 모든 주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게 되면서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의 구분은 조지 레이코프<sup>1)</sup>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상호 프레임

1) 조지 레이코프 지음, 유나영 옮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진보와 보수, 문제는 프레임이다』, 서울: 와이즈베리, 2015.

을 둘러싼 싸움을 통해 정치공학적 전략에 몰두하게 만들면서 사회를 감정적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갈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유럽사회와 달리 한국사회와 미국사회에 유난히 진보/보수 논쟁이 격렬한 이유는 분명한 노선의 이념정당이 뿌리내리지 못한 역사적 그리고 현실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일찍이 미국의 정치학자 세이무어 마틴 립셋<sup>2)</sup>은 그의 저서 ‘미국 예외주의’에서 미국사회에 노동당이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없는 상황을 적시하였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유럽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모두 우파적 색채를 띠지만 전자는 보수당으로 후자는 진보당으로 분류되면서 미국의 양당체제는 격렬하고 감정적인 정쟁을 보여준다. 한국의 진보/보수논쟁이 미국보다 더욱 감정적이 되는 것은 레이코프의 언급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프레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레이코프<sup>3)</sup>는 전략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자신의 가장 깊은 정치적 신념과 이해를 개념적 차원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들은 자신의 진정한 이념과 명확한 이해수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방식, 심지어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대립한다. 게다가 한국사회에서 정치영역과 다른 영역들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정치과잉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런 대립 구조에서 사회적 갈등의 악화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논쟁에서 진보=좌파 그리고 보수=우파의 등식을 비판하고 한국사회에서 우파의 범주 내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이념적 대결이 아닌 주관적이고 감정적 대결이 지배한다는 점을 추적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먼저 서구사회에서 관찰되는 다원화된 사회현상, 즉 정치영역에서 시작하여 경제영역과 민족문제, 환경문제를 거쳐 페미니즘을 다룸으로써 진보와 보수로 단순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2장). 이어서 한국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단순한 기준에 따라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3장). 그것을 위해 진보와 보수의 개념적 정의를 소개하면서 다원적인 기준이 약화되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기술할 것이다. 끝으로 현재의 극심한 대결과 갈등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4장).

2) 세이무어 마틴 립셋 지음, 문지영 외 옮김. 『미국 예외주의: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가』, 서울: 후마니타스, 2006.

3) 앞의 책, p.13.

## II. 서구사회에서 복합적 갈등의 등장배경과 유형들

### 1. 서구의 복합적 갈등 배경

서구사회에서 68운동은 사회변화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된다.<sup>4)</sup>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두 이데올로기를 지원하는 우파와 좌파의 대립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더욱 심화되었다. 이데올로기를 달리하는 국가 간의 대립뿐만 아니라 한 영토 내에서의 대립은 사회에 갈등의 강도를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좌파와 우파의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대결상황에서 1960년을 기점으로 점차 새로운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다. 청년들이 기득권을 장악한 우파에 대한 저항과 함께 좌파가 주도하는 기성정당에 대해서도 반기를 든 것이다. 서유럽을 중심으로 기성세대의 구속과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던 신좌파 청년들은 60년대 중반 미국의 베트남 침략에 분노하면서 거리로 뛰어들었다. 초기에는 특히 독일의 청년들이 저항의 분위기를 주도하였다. 독재왕권이라 비판받던 이란 팔레비왕을 국민으로 초대하는 우파 정부와 점차 자본가와 영합하는 좌파 야당 그리고 또 다른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한 동독을 모두 비판하였던 청년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려는 야망을 그대로 드러냈다. 하지만 그들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시위방식은 좌파 지식인으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에서 서서히 멀어졌다. 독일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 과격한 대학생들의 시위가 점차 식어갈 때쯤 다시 시위를 재점화시킨 곳은 그때까지 대학생들의 시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프랑스였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질서가 강했던 프랑스에서 학생들의 시위를 촉발시킨 사건은 기숙사 통금시간을 어긴 파리 근교 낭트대학의 남학생에 대한 처벌이었다. 1967년 11월 17일 낭트대학의 학생들은 자신들을 여전히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대학 본부에 저항하면서 대학생들의 자치권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권위주의적 태도로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서로 간의 타협없는 극한 대치가 이어지다가 1968년 3월 22일 학생들의 저항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sup>5)</sup> 대학생들이 미국의 베트남 침공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프랑스 주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무실을 점거하고 미국 국기를 불태운 것이다. 정부가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들을 체포하자 그동안 관망하던 대학생들이

4) Meyer, Thomas and Michael Müller, "Individualismus und neue soziale Bewegungen", Leviathan, Vol 17, no 3, 1989, pp.357-369; Rucht, Dieter, "Neue Konflikte und neue soziale Bewegungen in Deutschland", Brigitte Grande, Edgar Grande, and Udo Hahn eds., *Zivilgesellschaf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fbrüche, Umbrüche, Ausblicke*, Bielefeld: transcript Verlag, 2021, pp. 61-77.

5) 이성재, 『68운동』, 서울: 책세상, 2009, p.36.

함께 들고일어났다. 동맹휴업으로 학생운동 지도부와의 연대의식을 보여준 대학생들은 단순한 학내 시위에서 대대적인 정치투쟁으로 맞섰다.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비판하던 그들은 노동조합이나 야당인 공산당에 대해서도 반발하였다. 전통적 좌파로 분류되던 세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학생들의 변화를 위한 요구를 방관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격렬해지는 시위에서 대학생들의 피해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소극적으로 관망하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점차 태도를 바꾸어 과업을 통해 대학생들과 연대하였다. 위기감을 느낀 드골 정부는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분리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정부는 독자노선을 선택한 노동총연맹을 대상으로 협상안을 제시하였고 노동조합 지도부는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보장한 협상안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과업 중인 현장 노동자들은 그 이상을 요구하며 협상안을 거부하였다. 그러는 사이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시위대에 대한 국민여론의 지지가 식어갔고 운동을 주도하는 체계적인 조직이 없고 또한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명확한 방향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위대는 분열되기 시작하였다. 사분오열되던 시위는 드골대통령이 의회해산과 총선시행을 발표하면서 급격히 약화되었다. 결국 이어진 총선에서 우파는 대승을 거두었고 68운동은 최종적으로 실패로 귀결되었다.<sup>6)</sup>

68운동이 1969년 4월 27일 드골 대통령의 사임과 함께 프랑스에서 일단락되면서 서구 사회의 68운동은 종결되었다. 기성세대에 대한 단순한 저항에서 시작하여 정치투쟁으로 발전한 68운동이 최종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후 서구사회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특히 사람들의 의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의 좌파들은 노동과 자본의 대립 속의 자본주의의 모순은 노동운동을 통한 혁명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환경문제, 평화문제, 인권문제, 여성문제 그리고 대학생의 학원민주화문제를 등한시하였다. 더욱 뿌리깊은 문제는 우파뿐만 아니라 좌파들도 국가의 물질적 번영에 대해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었다. 자본주의적 분배와 나아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력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르쿠제와 같은 신좌파가 노동계급이 자신에게 귀속된 혁명주체의 역할을 제대로 완수하리라는 기대를 거두는 시점에 발생한 68운동은 노동운동 지도부의 독선과 함께 학생운동 내 남학생들의 거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확인시켜 주었다.<sup>7)</sup>

실패로 일단락된 68운동을 거울삼아 후배 대학생들은 정치혁명이 아닌 문화변혁을 향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고 그것은 좌파와 우파가 모두 집착하는 물질적 가치로부터

6) 위의 책, p.49.

7) 앨런 스콧 지음, 이복수 옮김, 『이데올로기와 신사회운동』, 서울: 한울, 1995, p.70.

벗어나 탈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sup>8)</sup> 그리하여 과거 기성세대들이 경시하였던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다. 소위 신사회운동이 도래하면서 과거의 기준으로 사회를 재단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실현과 함께 점차 경계가 희석되었던 좌파와 우파의 구분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사회적 경쟁과 대립은 일방적인 잣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게 되었다. 하버마스<sup>9)</sup>의 표현에 따르면 구정치에서 신정치로 이행하면서 확인된 ‘새로운 문제들이란 삶의 질, 평등권, 개인의 자기실현, 참여와 인권 같은 문제들이다. 과거의 자본과 노동의 대립과 갈등의 구조에서 벗어나 이젠 이와 같은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사회는 ‘반핵운동과 생태운동, (남-북 갈등의 주제를 포함하는) 평화운동, 시민주도운동,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빈집 점거나 대안프로젝트 실험, 그리고 지역코문운동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대안운동, (노인, 동성애, 장애인 등을 포함하는) 소수자 운동, 새생활운동 집단들과 신흥종교집단들의 심령운동, 종교적 근본주의, 납세저항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운동 등’의 다양한 흐름으로 나타난 것이다.<sup>10)</sup> 개인의 다양한 관심을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와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신사회운동의 제도화는 ‘민주주의로의 이행, 민주주의의 공고화, 그리고 기존 민주주의의 발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립적인 정치투쟁보다 바람직한 운동의 양태’를 보여준다.<sup>11)</sup> 그리하여 각 운동별로 다양한 세력들의 대립과 연대가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지만, 전체사회를 위협하는 극단적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전배경에 기초하여 신사회운동을 기준으로 한국사회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들이 서구사회의 경우 단순한 보수와 진보의 기준을 벗어나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이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 2. 사회적 갈등의 유형들

### 1) 정치적 구분의 기준인 좌파와 우파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진보와 보수의 구분은 서구사회의 정치영역에서, 즉 좌파와 우파의 구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좌파와 우파를 서로 비교하여 설명함으로

8) Ronald Inglehart,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77.

9) 위르겐 하버마스 지음, 장춘익 옮김, 『의사소통행위이론 2: 기능주의적 이성비판을 위하여』, 과주: 나남, 2007, p.601.

10) 위의 책, pp.602-603.

11) 서두원, “신사회운동의 제도화와 민주주의의 발전”, 권태환 외(공편), 『신사회운동이 사회학: 세계적 추세와 한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1, p.391.

써 정치의 이념적 갈등이 점차 완화되는 역사적 과정을 소개할 것이다. 프랑스혁명 당시 혁명과인 자코뱅당과 온건개혁파인 지롱드파에서 기원하는 좌파와 우파의 구분은 19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계급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정당으로 이어졌다. 좌파는 노동자계급을 지지하는 사회주의세력을, 우파는 자유주의에 기초한 자본가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잡았다.<sup>12)</sup> 먼저 좌파의 역사적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경제가 시작될 시기에 기계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된 숙련 노동자들은 러다이트로 명명된 기계파괴운동을 일으켰다. 하지만 자연발생적인 저항은 내부분열과 지도부의 체포 이후 큰 성과 없이 끝이 났다. 실패로 끝났지만, 러다이트운동은 노동운동에 인식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단순히 감정적인 저항으로는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한 노동자들이 점차 노동조직을 결성하였고 그들 사이의 연대를 확대시킨 것이다. 자본가와 그들을 지원하는 국가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연대는 그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선택이었다. 마르크스는 이런 노동자들의 열망에 적절한 이론적 자양분을 제공하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sup>13)</sup>는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동자들이 지역별 노조에서 시작하여 산업별 노조와 전국 중앙노조를 거쳐 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급진적이고 격렬한 정치투쟁을 일으키면서 세력을 확장시켰던 좌파는 19세기 말부터 크게 두 갈래로 나뉘기 시작하였다. 하나는 혁명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급진적 혁명노선에서 온건한 개혁노선으로 선회한 사회민주주의 계열이었다. 먼저 전자는 마르크스의 사상이 레닌의 투쟁으로 이어지면서 구체화되었다. 생산력이 높아질수록 노동자의 삶은 더욱 궁핍하고 비참해지는 자본주의 경제 현실에서 1800년대 초에 노동자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다. 경제투쟁이나 차티스트운동과 같은 온건한 운동이 대세를 이루었던 영국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장악하기 위한 왕권과 제정권력에 맞서는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이 연대하여 정치투쟁을 이어가면서 혁명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자연스럽게 프랑스에서는 협동조합운동을 제안한 프루동주의, 무장봉기를 주장한 블랑키주의 그리고 국가 파괴를 통한 무정부주의의 실현을 지향하는 바쿠닌주의가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마르크스주의와 아나르코 생디칼리즘 사이의 이념투쟁 이후 프랑스에서는 후자가 노동운동의 주요노선으로 부각되지만 레닌에 의해 좌경 수정주의로 비판되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면서 쇠퇴하였다.<sup>14)</sup> 마르크스 사상의 계

12) 주섭일, 『사회민주주의의 길: 서구 좌·우파의 실용주의』, 서울: 사회와연대, 2008, p.55.

13) 카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지음, 이진우 옮김, 『공산당 선언』, 서울: 책세상, 2018.

승을 선언한 소련이 등장한 이후 혁명적 사회주의는 현실화되었지만 민족국가의 단위를 넘어서는 전 세계 노동자 연대는 소련이 주변국들을 침공하고 자국의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논리로 활용하면서 전체주의국가를 변호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자본주의를 철저히 배척하는 혁명적 좌파와는 달리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온건한 좌파가 영국에서 등장하였다. 노동운동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혁명적인 방식에는 반기를 든 사람들이 페이비언협회를 창립한 것이다. 그들은 ‘사회를 최상의 도덕적 가능성과 일치되게 건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국유화하고, 공적지출의 재원을 간접세로 충당하고 성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5)</sup> 그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차티스트운동이 제도적으로 수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역사를 통해 점진적인 사회변화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sup>16)</sup> 1830년대 이미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통합을 시도한 존 스튜어트 밀의 정신을 계승한 페이비언협회는 유럽 전체 사회민주주의 이념의 선구자였다.<sup>17)</sup>

영국의 페이비언협회보다 10여 년 늦게 독일에서는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가 등장하였다. 원래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시작한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과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방식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였다. 당연히 의회를 통한 노동자계급의 권력장악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는 개혁으로는 아무것도 달성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sup>18)</sup> 그가 혁명적 사회주의의 미래를 꿈꾸던 때 독일에서 비스마르크에 의해 사회주의탄압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1878년부터 시행된 이 법을 피해 베른슈타인은 취리히를 거쳐 영국으로 망명하였다. 그는 사회주의탄압법이 폐기된 1890년 이후에도 영국에 머무르면서 다양한 서적들을 통해 사회주의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는 사이 사회주의에 대한 베른슈타인의 생각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다. 결정적 계기는 페이비언협회로부터의 영향이었다. 영국에서의 망명 기간 초기에 베른슈타인은 점진적 사회개혁을 지향하는 페이비언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마르크스의 사상적 경로와 전혀 다른 경로를 걸었던 페이비언과 베른슈타인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존재했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비판적 입장에서 점차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로 바

14) 김금수, 『세계노동운동사 1』, 서울: 후마니타스, 2013.

15) 보 구스타프손 지음, 홍성방 옮김. 『마르크스주의와 수정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의 비판과 그 이념사적 전제』, 서울: 새남, 1996, p.184.

16) 장석준, 『사회주의』, 서울: 책세상, 2013, p.102

17) 위의 책, p.107.

18) 최영태, 『베른슈타인의 민주적 사회주의론: 수정주의 논쟁과 독일사회민주당』,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7, p.51.

뀌었다. 근본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접점이 만들어졌다. 무엇보다 ‘자본주의의 필연적 붕괴론과 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론을 거부하고 대신에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에 의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는 주장, 새로이 출현한 중간계급에 대한 기대, 협동조합 원리에 대한 중시, 그리고 자유주의에 대한 긍정적 조망’이 베른슈타인의 마음을 끌었다.<sup>19)</sup> 이후 각각 영국의 노동당과 독일의 사회민주당의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은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온건하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고 그것을 통해 의회에 진출하여 그들의 이상을 실현하는 방식을 구체화하였다. 점차 전 유럽에 확산된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사회주의는 목표가 아니라 끝나지 않는 과정이었고 복지국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파와의 타협과 협력의 결과물이다.<sup>20)</sup>

두 갈래로 구분하여 설명한 좌파와 맞물려 우파도 두 개의 흐름, 즉 극단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파시즘 그리고 좌파와 복지국가를 매개로 접점을 찾는 온건한 개혁세력으로 나뉜다. 우파의 기원을 앞에서 살펴본 내용에 이어서 설명하면, 자본가와 기업가를 대변하는 우파는 시장에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목표였고 개인주의에 기반한 자유로운 경쟁을 선호하였다.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들에게 최선의 환경은 국가가 국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국외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었다. 1776년 미국의 독립혁명과 1789년 프랑스혁명을 기폭제로 등장한 민족개념은 영토 내의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면서 강한 소속감을 심어준다는 차원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적절한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었다.<sup>21)</sup> 민족개념은 한 영토 내의 다른 문화를 가지는 소수 종족도 정치적 의미를 발동시켜 동일한 권리를 가진 구성원으로 포용하였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와 선택적 친화성을 가지게 된 민족개념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여성과 소수 종족의 정치적 권리를 제도권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서구의 근대 민족국가(nation state)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민족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변용하였다. 한편으로 민족주의는 자국의 국민에게는 민주국가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외부를 향해서는 제국주의적 모습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그들은 국외 시장에서 자국 자본가의 활동을 보호한다는 명분과 국내적으로 부의 재분배 정책을 위하여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어 서구 열강들,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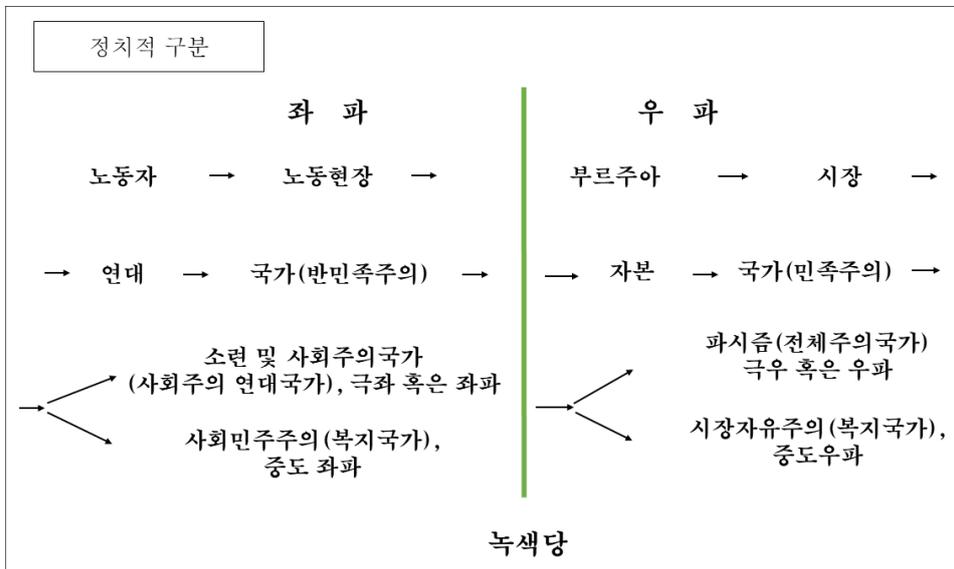
19) 위의 책, p.62.

20) 도널드 서순 지음, 강주현 외 옮김, 『사회주의 100년: 20세기 서유럽좌파와 정당의 흥망성쇠』, 서울: 황소결음, 2014, p.84.

21) 베네딕트 앤더슨 지음,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 2002.

히 영국과 프랑스는 피식민지 국민에게 독재국가의 모습 그 자체였다. 반면 이들 국가에 비해 뒤늦게 식민지 전쟁에 뛰어든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독일에서는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국민들에게 단결을 강요하는 파시즘과 나치라는 극단적 민족주의가 출현하였다.<sup>22)</sup>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서구국가의 우파들은 제국주의와 전체주의에 대한 자기비판을 하였다. 새롭게 만든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때마침 성공한 경제적 부흥과 함께 맞이한 자본주의 황금기에 서구사회의 우파들은 복지정책을 확대하였다. 혁명적 사회주의를 폐기하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의회에 진출하려는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정당에 우파 정당들도 적극적 복지정책으로 맞서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점차 두 정당의 정책적 차이는 열어졌고 각각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의 성격을 띠었다. 우파와 좌파 중심의 정치체제는 68운동 이후 다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였다. 좌파와 우파가 동일하게 지향했던 물질적 가치에 반발하는 탈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등장하였고 1980년대 독일에서 마침내 녹색당이 창당된 것이다. 그 결과 <그림 1>에서 보듯이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의 폭은 넓어질 수 있었다.



<그림 1> 서구 정치세력의 관계 변화

22) 장문석, 『민족주의』, 서울: 책세상, 2011, p.104.

이러한 역사적 변화 속에서 다양한 유권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정당 간의 이념적 대결은 완화될 수 있었다. 선거를 통해 여당과 야당의 위치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정치환경에서 적어도 정권을 담당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정당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유권자, 특히 중간층의 높은 지지를 얻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되면서 좌파와 우파의 정책적 구분은 유권자들에게 점차 희석되었고 정치적 수사로 남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정치영역에서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더욱 의미를 상실하는 개념이 되었다.

## 2) 진보와 보수의 단순한 구분을 어렵게 하는 경제영역

통상적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류층은 보수 그리고 노동자층은 진보로 간주된다. 하지만 정치적 기준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등식은 쉽게 허물어진다. 이런 등식의 문제점을 먼저 기업가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기업가들은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그리고 마르크스의 표현에 따르면 상대적 잉여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새로운 생산수단을 지속적으로 고안하고 개발해야 했다. 기업가와 자본가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경제원리는 자본주의 경제의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원동력이었다. 슈페터<sup>23)</sup>는 이것을 창조적 파괴 혹은 혁신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였으며 자본주의 경제의 강력한 엔진으로 설명하였다.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혁신과 조직혁신을 추진했던 기업들은 마침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는 대기업이 될 수 있었다. 그들이 주도하는 혁신은 경제영역에서 산업의 구조변동을 이끌어가는 핵심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산업현장에서 전기와 컨베이어벨트가 연결되고 전화 통신과 철도 및 도로라는 교통이 뒷받침한 소위 2차 산업혁명은 혁신이 실현된 좋은 사례였다. 당시 헨리 포드는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를 철저히 통제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컨베이어벨트의 도입이라는 획기적인 생산방식의 전환과 함께 과감한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경제영역의 보수적인 면과 진보적인 면의 양면성을 보여주었다. 이후 산업의 구조변동과정에서 기업가들은 기존의 관료제에서 탈피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직혁신을 모색하였고 새로운 기술혁신을 추진하였다. 1950년대 미국에서 컴퓨터가 등장하고 1970년대 일본에서 도요타 생산방식이 도입되면서 경제영역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기업가들은 끊임없이 그런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현실에 안주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낙오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3차 산업혁

23) 요제프 슈페터 지음, 이종인 옮김,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서귀포: 북길드, 2016.

명을 거쳐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노력은 기업인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방식이었고 산업의 구조변동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를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업가들이 비록 정치적으로 우파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경제영역에서 그들을 단순히 보수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가령 유럽의 경우처럼 일부 상류층이 정치적으로 좌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미국의 경우처럼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기부나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가나 상류층의 선택이 동료 기업가들이나 상류층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을 분리시켜 생각하고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로 단순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은 노동자의 관점에서도 발견된다. 정치적으로 좌파로 기울 수 있는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은 경제영역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산업의 구조변동에 부정적이고 혁신에 대해 소극적이고 때때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준다.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인이 시장을 중심으로 이윤을 높이고 효율을 강조할수록 노동자들의 자리는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복지국가의 분배 정책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노동자들의 의식은 점차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상급자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더 높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개별적으로 경쟁하였다.<sup>24)</sup>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이 경제영역에서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현상은 1980년을 전후로 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1979년 영국에서는 대처 총리가 1980년에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정치의 정점에 등장하였다. 그들은 신보수주의의 이름으로 복지국가의 규모를 대거 축소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시장을 강조하면서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신보수주의 정부가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던 만큼 시장에서의 경쟁의식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68운동과 함께 서구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개인화현상이 나타났다. 복지정책으로 생활수준의 전반적 향상이 노동자들에게도 이식된 것이다. 소수의 노동자들은 이전의 노동조합이 주는 안정감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전문성과 그에 대한 높은 대가를 얻어내기를 희망하였다.

24) 피에르 부르디외 지음,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下』, 서울: 새물결, 2005.

그것은 한편으로는 프리랜서로 독립하려는 능력있는 개인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노동조합에서 탈피하여 별도의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이런 흐름은 현실 사회주의국가의 몰락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전통적으로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독일에서조차 노동조합의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노사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노조조직들 사이의 갈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sup>25)</sup> 전문기술직 노동자, 숙련노동자 그리고 비숙련 노동자들 사이의 주도권 경쟁은 철도에서의 철도노조 트란스넷과 기관사 노조 간의 경쟁 그리고 항공사에서 독립승무원조직과 서비스노조가 승무원을 놓고 벌이는 경쟁에서 확인된다.<sup>26)</sup> 노동조합의 위기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킨 독일의 노동조합 간의 주도권 경쟁은 다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틀에서 조직혁신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주고 있지만<sup>27)</sup> 노동자들이 자기이해를 얼마나 양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독일 이외의 국가, 특히 전 세계 산업의 구조변동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노동조합 내에서 기존 노조원들이 자신의 임금과 고용을 지키기 위하여 후임 입사자뿐만 아니라 잠재 신규인력에 대해 보여주는 모습에서 이기주의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sup>28)</sup> 이처럼 경제적 변화에 저항하거나 자신의 경제적 이해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을 단순하게 좌파 혹은 진보로 일반화하는 것은 경제영역에서의 급변하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 3) 환경운동의 다양한 스펙트럼

68운동 이후 탈물질적 가치에 기초하여 등장한 환경운동은 그 자체가 기성세대를 비판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실천이라는 점에서 진보적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따져보면 좌파와 우파의 전통적 이념에서 벗어나서 마셜이 나열한 근대사회의 기본정신인 시민권 중 공민권에 기반한다.<sup>29)</sup> 다시 말해 자유주의적 정신에 기초하여 좌파와 우파의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신과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68운동과 함께 1980년대 서구에서 확연히 나타난

25) 박명준, “독일의 노동조합간 경쟁: 양상과 논점”, 『국제노동브리프』 9권 5호, 한국노동연구원, 2011, pp. 48-55.

26) 위의 논문, p.51.

27) 정명기, “독일 노사관계 변화에 대한 쟁점들”, 『한독논총』 34권 1호, 한독경상학회, 2016, pp. 21-41; 이상호, 『독일의 일자리 혁명』,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28) 이정현, “미국 이중임금제를 통해 본 노조 연대와 집단이기주의의 문제”, 『국제지역연구』 22권 3호, 국제지역학회, 2018, pp.221-251.

29) 토마스 험프리 마셜·토마스 버튼 모트모어, 조성은 옮김, 『시민권』, 서울: 나눔의 집, 2014.

개인화현상은 서구사회의 다원화를 더욱 강화시켰고 환경운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개인화의 영향으로 정당, 노동조합,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약해지면서 개인들이 각자의 도덕적 가치나 기준에 따라 환경운동과 같은 사회 현안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환경운동의 한 유형인 탈원전운동이 독일사회에 가져온 결과를 통해 이런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1986년 울리히 벡<sup>30)</sup>은 그의 저서 ‘위험사회’에서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지만, 근대 사회에서는 위험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는 점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사례를 통해 지적하였다. 그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경고나 생태문제에 대한 접근은 이념을 넘어서는 대상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독일사회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 그의 주장은 이후 독일 환경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녹색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점차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대시킨 녹색당은 1998년 마침내 사민당의 연정파트너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다. 이후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정에서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당과 자민당(FDP)의 연정으로 바뀐 시점인 2011년에 탈원전운동은 독일에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엄청난 재앙이 발생한 것이다. 독일사회에서 잠시 소홀히 다루어졌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는 다시 공론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당시 메르켈 총리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사고가 일어나기 전 2022년에 폐쇄예정이었던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상태였다. 하지만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독일 전역에 대대적인 반원전운동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녹색당이나 환경운동에 관심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민당 내에서도 거세었던 반발은 정부여당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이어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건이 일어난 후 기민당이 전후 54년 동안 집권했던 바덴-뷔템베르크에서 녹색당이 대승을 거두고 사민당과 공동정부를 맺는 정치적 변화도 발생했다. 결국 핵산업에 우호적이었던 메르켈 총리는 원전폐쇄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sup>31)</sup> 앙겔라 메르켈이 선언한 2022년 원자력발전소 완전 폐쇄 결정은 해당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잠시 유보되었다가 2023년 사회민주당과 녹색당과 자유민주당의 연정정부가 2023년 4월 15일 최종적으로 남은 원자력발전소 3기를 폐쇄하면서 탈원전운동은 일단락 되었다.<sup>32)</sup> 이처럼 환경문제는 좌와 우의 이념적 대립을 넘어서는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주제이다.

30) 울리히 벡, 홍성태 옮김,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 1997.

31) 엄광희, 『잘가라, 원자력: 독일 탈핵 이야기』, 과주: 한울아카데미, 2012, p.59.

32) “독, 남은 원자력 발전소 3기 폐쇄...60여 년 원전에 마침표”, 『파이낸셜뉴스』 2021년 8월 10일.

## 4) 민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반대급부로서 극우 민족주의의 부활

위의 <그림 1>에서 보듯이 서구사회에서 민족문제는 우파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민족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형성된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만들어졌다는 학문적 연구에 따라 서구사회에서는 민족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연속적으로 나타났다.<sup>33)</sup> 민족주의를 앞세워 충돌했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분주히 진행된 것이다. 최초 6개국의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에서 출발하여 유럽경제공동체(EC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결성으로 이어진 후 세 공동체는 1967년 유럽공동체(EC)로 재편되었다. 유럽을 통합하려는 의지는 경제영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방위영역, 교육영역, 그리고 외교정책까지 확대되면서 마침내 유럽연합(EU)에 이르게 되었고 2002년 화폐(유로화)를 통한 단일시장까지 이어졌다. 단일 화폐시장에 가입하기를 거부하는 소수의 국가들, 스웨덴이나 영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통합된 유럽연합의 꿈은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실현가능한 미래로 인식되었다.<sup>34)</sup> 하지만 유로화의 시행 이후 점차 부정적인 시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독일의 경제적 강세로 인한 유럽연합 내에서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그리스의 경제위기로 인해 유럽연합 내 국가 간 양극화의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그 영향으로 유럽연합의 위기에 대한 우려와 심지어 극우 민족주의의 부활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민족주의의 부활은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이미 예견되었다. 과거 사회주의국가에서 열악하지만 비슷한 경제생활을 했던 동유럽 국가와 구동독지역의 사회구성원들은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합류되면서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된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가 존재할 때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민족에 대한 비판적 교육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동독지역이나 구사회주의국가에서의 극우 민족주의의 발흥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 환경적 차원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즉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편입된 이후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에서 절망과 분노를 느끼면서 자신을 대변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을 민족주의에서 찾았다. 과거 민족주의를 극복한 전 세계 노동자의 계급적 연대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극좌 전체주의에 익숙했던 그들은 변화된 세상에서 민족주의에 의지하여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갈망’하는 극우적 사고로 탈바꿈한 것이다.<sup>35)</sup> 그리하여 구사회

33) 한스-울리히 벨러 지음, 이용일 옮김, 『허구의 민족주의』, 서울: 푸른역사, 2007.

34) 강원택·조홍식, 『하나의 유럽: 유럽연합의 역사와 정책』, 서울: 푸른길, 2009.

35) 이규영·김경미, “체제전환 이후 동유럽 극우주의의 발흥과 극우정당의 발전에 대한 연구”, 『유럽연구』 30권 1호, 한국유럽학회, 2012, p.51.

주의국가와 구동독지역에서는 극좌세력과 극우세력이 서로 경쟁적으로 사회에 적대적인 모습과 혐오하는 정서를 보여주면서 소위 극과 극은 통한다는 격언을 확인시켰다.

극단적 민족주의 부활에 대한 다수의 우려가 있었지만,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경계의 대상이었던 네오나치와 같은 극우주의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들의 정치적 지분도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다. 세계화가 가져온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낯선 문화권 사람에 대한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에서 결정적으로는 아프리카대륙과 아랍지역으로부터 밀려오는 난민이 점차 유럽사람들로 하여금 잠시 잊혀졌던 민족정서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나아가 다른 문화 혹은 난민 이주자에 대한 혐오정서를 강화시켰다. 일부에서는 극우 민족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과거 사회주의국가였던 구동유럽과 동독지역에서 극우 민족주의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000년대 넘어서 영국과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의 모범국가에서도 민주주의의 위기가 경고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극우 민족주의 혹은 극우 인종주의는 단지 과거 전체주의국가의 경험을 가진 동유럽과 구동독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분명해진다.<sup>36)</sup> 여기에 사회통합에 대해 오랫동안 천착하였고 그 결과 안정된 정치체제와 사회적 규범을 가졌던 독일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이후 극우와 극좌는 모두 세계화를 상대로 극렬하게 저항하였다. 극좌가 미국중심의 세계화가 전 세계 민중들의 삶을 더욱 나락에 빠뜨린다는 이유를 내세운다면 극우는 세계화를 독일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든 결정적 요소로 지목하였다. 민족주의를 거부하는 극좌와 민족주의에 의지하는 극우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존재하지만, 세계화를 반대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저항은 표면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후 극좌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반면 극우는 점차 영향력을 확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회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적절한 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장담했다. 하지만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급변하였다.

2010년 중반 시리아 내전으로 난민이 대거 발생하였다. 그들의 피난은 유럽사회에서 그들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 혹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어느 선까지 수용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독일 메르켈 정부는 부족한 노동력의 수급 차원과 난민에 대한 인권 차원에서 많은 수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메르켈의 난민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극우 민족주의자들은 일부 독일 국민들의 반이슬람정서와 연결시켜 갑작스럽게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시켰다. 이어서 그들은 이슬람을 혐오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당정치

36) 콜린 크라우치, 이한 옮김, 『포스트 민주주의: 민주주의 시대의 종말』, 서울: 미지북스, 2008.

에 뛰어들었다.<sup>37)</sup> 독일대안당(AfD)으로 명명된 극우 민족주의 정당은 점차 세력을 확장하여 2017년 총선에서 마침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 그들의 정치적 성과는 과거 해적당과 같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갈수록 지지세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로 전화되고 있다. 그것을 선거 결과가 보여준다. 2017년 총선에서 12.6%의 득표율과 94석의 의석수로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시민당에 이어 제3당의 위치를 차지한 독일대안당은 2021년 총선에서 다소 하락했지만 10.3%의 득표율과 83석의 의석수로 시민당, 기민당/기사당 연합, 녹색당, 자유민주당에 이은 제5당의 위치에서 지지세가 여전히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연방총선에서는 득표율과 의석수를 잃었지만 독일대안당이 2023년 주의회 선거에서 튀링겐주 조네베르크시의 시장으로 자당의 후보를 당선시키면서 정계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는 한목소리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sup>38)</sup> 따라서 과거 전체주의를 경험했던 국가이든 현재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국가이든 민족주의는 그것을 비판했던 좌파뿐만 아니라 강조했던 우파도 적극적으로 풀어야 하는 난해한 과제가 되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 진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게 서로 타협하고 협력해야 하는 숙제를 안겨주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 5) 다양한 페미니즘 유형들

기원적으로 여성운동은 프랑스혁명 당시 여성운동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올랭프 드 구즈의 사례에서 보듯이 좌와 우의 구분에서 벗어난 주제이다. 프랑스혁명에서 인권선언이 선포되었지만, 여성들은 그 인권에서 제외된 존재였다. 지롱드파와 친분이 있었던 구즈는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선언문을 작성한 뒤 급진적인 자코뱅파에 의해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sup>39)</sup> 이후 사회의 주류로 자리잡은 부르주아 계급에 의한 핵가족 제도에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는 여성들을 억압하였고 여성들은 영국의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처럼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체제에서 한계를 느낀 일부 여성운동가들은 사회주의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가 실현된다면 여성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성운동은 사회주의운동 내에서 하나의 작은 주변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서구사회의 여성운동은 68운동을 기점으로 좌파의 여성관에 대해

37) 김승아·김면희, “이슬람혐오증과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의 선거전략: 2017년 총선과 2019년 주의회 선거를 중심으로”, 『EU연구』 통권 62집,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2, pp.155-186.

38) “첫 ‘극우 정당 시장’ 배출에 독일 긴장... ‘민주주의 위기’ 우려”, 『한국일보』 2021년 8월 10일.

39) 이세희, 『프랑스 대혁명과 여성·여성운동: 페미니즘의 파란만장한 드라마』, 서울: 탐북스, 2012.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기성세대에 맞서 세상을 변혁하려는 사회주의 독일 학생연합 내에서 남성과 여성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무엇보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이 ‘대외적으로는 반권위적인 행동을 요구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여학생, 부인, 파트너에게 상당히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분노하였다.<sup>40)</sup>

68운동이 실패로 끝난 후 신사회운동이 나타난 것과 궤를 같이하면서 여성운동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여성운동은 최초의 자유주의 페미니즘 및 사회주의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다양한 흐름으로 분화되었다. 기존의 억압구조로부터 여성이 해방될 수 있는 방식은 단순히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적용이 아니라 특수적이고 주관적인 요소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sup>41)</sup> 그리하여 성에 대한 강한 인식과 심리학, 정신분석학 등의 문화적 측면이 페미니즘운동에 적용되면서 페미니즘운동은 하나의 통일된 운동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국가별 그리고 문화별로 상이한 특징을 보여주는 페미니즘은 ‘미국의 경우 좌파적 지향을 지닌 사회주의 여성운동보다는 성고유의 문제를 중시하는 급진적 여성운동과 자유주의 여성운동’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여성들의 중산층화가 활발히 진행된 미국사회에서 페미니즘이 낙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배경이다.<sup>42)</sup> 반면, ‘유럽의 경우는 좌파적 지향을 가진 당이나 노동조합을 토대로 한 마르크시즘에 기반한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세력이’ 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다.<sup>43)</sup> 또한 페미니즘이 분화되면서 내부적으로는 남성과의 차이를 강조하는 급진적인 운동으로 나아가는 유형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내지 어려움을 토로하는 온건한 페미니즘도 공존하고 있어서 페미니즘을 두고 진보/보수로 나누기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이 되었다.<sup>44)</sup>

### Ⅲ. 사회적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국사회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서구 특히 독일사회는 68운동과 1980년대 개인화 현상 이후 분화된 다양한 영역들이 각각의 논리에 따라 작동하면서 좌와 우의 대립과 갈등이 약해진

40) 나베-헤르츠 로제마리 지음, 이광숙 옮김, 『독일 여성운동사』, 성남: 지혜로, 2006, p.86.

41) 장미경, 『오늘의 페미니즘, 세계 여성운동』, 서울: 문원, 1996.

42) 알렉산더 타바록 지음, 서은경 옮김, “낙태와 자유”, 웬디 맥엘로이(편), 『여성과 자유: 21세기의 자유와 페미니즘』, 서울: 나남, 2006, pp.233-269.

43) 장미경, 앞의 책, p.29.

44) 조안나 윌리엄스 지음, 유나영 옮김, 『페미니즘은 전쟁이 아니다』, 고양: 별글, 2019.

것과 동시에 진보와 보수의 구별도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주제가 되었다.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조율할 정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그것에 반해 사회 각 영역의 대립과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사회나 한국사회가 외형적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다양한 영역으로 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진보와 보수의 구분으로 인해 감정적 대립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정치영역이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과 기능을 외면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구체적이지 않은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한편의 국민에게는 정치적 냉소를 심어주고 다른 한편의 국민에게는 정치과잉화 현상을 조성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리적 접근이 아니라 감정적 대응을 초래하고 분열양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갈수록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이 사람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본 연구는 보수와 진보를 둘러싼 논쟁의 개요를 설명한 후 구체적인 한국사회의 갈등양상을 추적할 것이다.

### 1. 한국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개념의 의미

1945년 해방과 함께 좌우의 대립과 갈등을 첨예하게 경험한 남한에서는 미군정과 우익정부의 독재정치를 거쳐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좌파가 설 자리는 갈수록 협소해졌다. 영국의 노동당 혹은 독일의 사회민주당과 같은 명확한 이념정당을 만들기 어려운 사회분위기는 조봉암으로 하여금 진보당이라는 추상적인 당명을 정하도록 만든 배경이었지만 1958년 진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국사회에서 좌파정당을 결성하기는 더욱 어려워졌고 진보도 쉽게 언급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다. 개념쌍인 진보가 사라진 사회에 보수는 그 단어가 주는 ‘완고, 타성, 정체, 소심과 같은 일상의 부정적인 함의’를 연상시키면서 사용을 꺼리게 되는 대상이 되었다.<sup>45)</sup>

보수가 다시 정치사에 등장한 시기는 1980년대부터이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학생운동은 이념적 무장을 시작하였다. 강압적인 공권력을 앞세운 군부정권에 맞서고 나아가 사회혁명을 성취할 수 있는 무기로서 그들은 마르크스-레닌의 사상과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이념무장을 선택한 것이다. 사상무장을 한 그들은 기성 야당을 집권세력과 동일시하며 보수로 규정하였다. 그것은 민주화운동 세력이 민주 우파와 민주 좌파로 분열되는 것을 의미하였고 1980년대 후반부터 보수개념에 대립하는 진보의 개념이

45) 권용립, “한국의 ‘보수’: 개념의 궤적과 역사적 특징”, 『담론 201』16권 4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13, p.101.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배경이었다. 한국사회에서 민주화와 1990년대 서구 사회주의국가의 몰락은 이념적 구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재야 운동권이 한편으로는 노동계로 진출하면서 여전히 혁명을 꿈꾸는 부류와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로 규정하고 비판했던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에 합류하는 부류로 분열된 것이다. 그리하여 인적 흐름이 얽히면서 서구에서 통용되는 이념적 기준이 어렵게 된 반면 서로를 규정하는 방식은 갈수록 단순해졌다.

이런 변화된 한국의 사회적 조건은 진보와 보수의 구분기준이 모호해지면서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학계 밖의 일반적 시각으로는 현재 국민의 힘은 보수,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은 진보로 분류된다. 반면 학계 내부적으로 일부는 진보세력을 ‘노동계급을 비롯한 민중의 사회적 정치적 주체 형성과 함께, 무엇보다 민주변혁을 지향하는 진보적 민중운동세력이 자유주의 세력에게 ‘탈취’당한 민주화 투쟁의 역사적 헤게모니와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대표성을 획득하는’ 것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규정한다.<sup>46)</sup> 조현연의 정의에 따르면 한국사회에 진보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반면 보수의 입장에서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원리들을 지지하고 변호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태도라고 정의된다.<sup>47)</sup> 그의 정의에 따르면 한국사회에 보수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이 극소수일 것이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현실과 동떨어져서 규정되는 진보와 보수는 각 진영에 의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이 되었다. 두 진영은 서로 더욱 감정적으로 대립하면서 자칭 보수는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상대를 좌파=친북=통일이상주의자로 소위 진보는 상대를 수구=반북=분단반민족주의자라는 논리로 공격하였다.<sup>48)</sup> 이후 사회가 외형적으로 분화되는 것과는 별개로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 대립과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본 연구는 이런 양상이 서구를 중심으로 언급한 내용과 비교하여 한국사회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한국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적 양상의 배경

### 1) 정치적 진보/보수의 구분이 낳은 오해들

현재 한국사회에 정치적으로 오해를 초래하는 이유는 ‘더불어 민주당’이 진보로 분류되

46) 김용민, “한국정치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 김세균(편), 『한국정치의 보수와 진보』, 서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5, p.24.

47) 복거일, “한국의 보수를 논한다”, 박효종 외, 『한국의 보수르 논한다: 보수주의자의 보수 비판』, 서울: 바오, 2005, p.67.

48) 권용립, “한국의 ‘보수’: 개념의 궤적과 역사적 특징”, 『담론 201』 16권 4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13, p.101.

면서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더불어 민주당’에게 진보=좌파의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지만 주지하듯이 ‘더불어 민주당’의 출발은 우파 정당에 기원하며 1955년 9월 18일 창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 의도와 자유당 독재를 저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세력들이 결집하면서 신당이 창당되었다.<sup>49)</sup> 신당의 중심세력들은 ‘자유당과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사회민주당과 같은 정당’과 철저히 거리를 두었다. 창당 과정에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진보당과 조봉암을 배제한 이유기도 하였다.<sup>50)</sup> 그것은 민주당의 창당이념이 우파의 방향성과 일치한다는 의미였고 주류가 이전의 한민당에서 시작하여 민국당을 거쳐 민주당 창당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기존의 주류인 민주당 구파와 창당과정에 합류한 민주당 신파는 이후 선거 때마다 구성원들 사이의 정파와 친소문제를 중심으로 사사건건 대립하였다. 여기에 자유당에 대한 투쟁의 방법론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면서 내부적으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sup>51)</sup> 가령 우파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민주당 구파와 신파는 보안법개정을 두고 시각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현실에 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구파는 최소한의 개정만을 요구한 것에 반해 신파는 전면적인 거부를 주장하였다.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통일된 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자유당 의원만으로 보안법은 법사위에서 날치기로 통과되었고 한 정당 내 두 정파 간의 감정적 갈등은 다시 한번 크게 악화되었다. 이런 민주당의 성격은 1960년 정권교체와 함께 집권당이 된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결국 민주당은 신파와 구파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민주당과 신민당으로 분열되었다. 결국 민주당은 1961년 5·16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당하였고 야당으로서의 긴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제3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야당은 계속 분열과 통합의 지난한 반복을 경험하였지만 196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중당과 신한당을 다시 결집한 통합야당인 신민당을 창당하였다.<sup>52)</sup>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 후보가 공화당 박정희 후보에게 패배한 후 신민당은 새 리더십을 모색하였고 1970년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임시전당대회에서 김대중과 김영삼이 격돌한 결과 김대중이 승리를 거두었다. 여전히 정강이나 정책이 아닌 개별

49) 심지연, “한국 정통 야당의 기원과 성격”, 류상영 외(편저), 『김대중과 한국 야당사』,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p.21.

50) 위의 논문, p.28.

51) 위의 논문, p.43.

52) 김수진, “군부 권위주의 시대의 야당과 신민당”, 류상영 외(편저), 『김대중과 한국 야당사』, 서울: 현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p.70.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당권경쟁이 당의 통합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 김대중은 1971년 4월 27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였지만 곧이어 실시된 제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신민당은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하였다. 전체 204개 의석 중 민주공화당이 113석을 차지한 데 반해 신민당이 89석을 차지하여 국회의석 수에서 근소한 차이로 공화당을 위협하였다.<sup>53)</sup> 무엇보다 지지할 정당이 없는 노동자들이 정부의 강압적인 노동통제정책에 대한 반발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신민당을 지지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sup>54)</sup>

선거 이후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조차 내부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1972년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선포하였다. 야당은 선택의 여지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복원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재야인사들과 투쟁의 대열에 나섰다.<sup>55)</sup> 지금까지 전개된 과정을 살펴 보더라도 민주당의 역사는 우파의 역사였다. 하지만 좌파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정통 야당은 1971년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소수 좌파의 지지를 동원할 수 있었다. 특히 1971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는 평화통일론을 제창하면서 반공이데올로기로 국정을 장악한 박정희 정부에 민족의식을 앞세워 정치적 대척점을 형성하였다. 이어서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과 제5공화국의 출현 이후 펼쳐진 한국정치사에서 민주당계열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게 되면서 점차 세를 확산하였다. 80년대 초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된 재야 운동권과 학생운동권에 의해 보수 정당으로 규정되었지만 1985년 2월 12일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정통 야당 신한민주당은 민주정의당과 전두환 정부에 대적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면모를 조금씩 쌓아갔다. 마침내 1987년 민주화운동을 통하여 전체 대야투쟁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반면 공화당은 권력을 계속 지키려는 과정에서 우파의 범주에서 이념이 매우 협소해졌다. 무엇보다 만주군 장교라는 정치적 원죄와 국민의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를 통제하기 위한 반공이데올로기에 의존하면서 보수의 이미지가 아닌 수구의 이미지가 점차 강화되었다. 박정희와 공화당에게 자유는 개인 내부에서 표출되는 기본정신이 아니라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개념이었다. 후자에서부터 출발하면서 자유는 반공을 위해 통제되고 억제될 수 있다는 역설에 빠졌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일제강점기 시대와 그 시대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미화하게 되고 그리하여 수구로 규정되었다. 이런 이미지는 전두환 정부와 민정

53) 류상영, “김대중과 1971년 대통령 선거”, 류상영 외(편저), 『김대중과 한국 야당사』,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p.154.

54) 임혁백, 『시장, 국가, 민주주의: 한국민주화와 정치경제이론』, 서울: 나남, 1994.

55) 심지연, 『한국정당정치사: 위기와 통합의 정치』, 서울: 백산서당, 2004.

당에 들어서서 더욱 고착화되었다.<sup>56)</sup> 전두환 정부는 자신들에게 형성된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하여 정치적 경쟁자인 야당의 대표 김대중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고 시도하였다. 김대중을 광주민주화운동을 연결시켜 내란음모죄를 적용하여 김대중=친북=빨갱이=전라도의 등식을 국민에게 주입시켰다. 하지만 역으로 정부여당은 재야 세력과 학생운동권에 의해 군부세력=반공=친일=친미=반민족 세력으로 규정되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이 정부와 야당 모두에게 반쪽의 승리로 끝난 이후 재집권한 노태우 정부는 여전히 기본적으로 권위주의적 모습을 견지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시도하였다. 즉 북방정책을 통해 냉전에 기반한 과거의 협소한 이념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여기에 3당 합당 이후 민주화운동에서 상당한 지분을 갖는 김영삼계에 과거 재야 운동권 출신들이 합류하면서 민정당은 수구에서 보수로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었다. 민정당의 변화와 맞물려 민주당에도 재야인사들과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참여하면서 점차 보수에서 진보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하지만 같은 우파의 범주 내에서 정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지만 두 정당은 과거부터 쌓여온 행적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민주당은 좌파 정치인이나 좌파 인사로부터 보수로 비판받고 그런 민주당은 현재 국민의 힘을 수구세력으로 규정한다. 이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 바뀌는 보수와 진보 논쟁은 구분의 모호함에 따라 정치권에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내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를 비난하고 악마화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리하여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국민들을 흑백논리의 감정적 대립으로 내모는 용어로 동원되고 있다. 그것을 다음의 주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2) 경제영역에서의 모호한 보수와 진보의 구분

정치경제학이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 초기에 정치와 경제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지만 19세기 중반부터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근대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문화의 구성요소인 개인주의가 획일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다원화된 사회를 지향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서구에서는 개인주의에 기반하여 자신의 정치적 색깔과는 별도로 매우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기업인들은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면서 새로운 혁신이나 기술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단지 성공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불평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과도한 경제 불평등과 불공정이 사회 불안정의 요인이 되거나 경제발전의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56) 이나미, 『한국의 보수와 수구』, 서울: 지성사, 2011.

이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한 시장과 공정한 분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1990년 이후 시장에서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그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가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기업에게 부과된 개념이 등장한 초기에는 기업의 자율성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무엇보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위한 활동을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문제제기였다.<sup>57)</sup>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제도화로 나아가려는 노력은 정치적 좌파와 우파의 정치적 이념과는 분리되어 진행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논의는 1990년 이후 등장한 거버넌스 개념과 함께 이념을 넘어서서 불평등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19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등장한 사회적 경제개념이 새롭게 주목받은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구 유럽에서 이념적 논쟁이 줄어들고 다양한 협력을 위한 실천들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였다. 그런 사회적 토대 위에서 노사정 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협의체는 기업가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관련 단체들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반면 서구와 비교하여 한국사회는 여전히 개인주의가 아닌 연고주의에 기반한 유사 집단주의 혹은 유사 가족주의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정치과잉화의 경향과 연결되면서 경제영역에서의 다양한 논의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경제영역에서 자신의 소속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이다. 이런 현상을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 강남좌파 논쟁이었다. 한 언론인이 강남에 거주하는 소위 상류층 사람들을 사이비 좌파로 규정하면서 우파 못지않게 기득권을 누리는 그들의 이중성을 비판하였다.<sup>58)</sup> 부유층에게 경제수준에 따른 정치적 선택을 강요한 것이다. 소위 강남좌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는 강준만<sup>59)</sup>의 지적처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한다. 하지만 이런 일방적인 비판은 단순한 이념적 대결로 환원시켜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고 한국의 고질적인 정치과잉화를 부채질하였다. 위에서 기술한 기준에 따르면 사회과학적이고 명확한 좌파와 우파의 구분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막연한 보수와 진보로 구

57) 이승협,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역할: 자율주의를 넘어 제도화로”, 『산업노동연구』 18권 1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012, p.209.

58) “좌파도 좌파답게”, 『국민일보』, 2005년 10월 14일.

59) 강준만, “강남좌파: ‘엘리트 순환’의 수호신인가?” 『인물과 사상』 2006년 5월호 통권 97, pp.81-92.

분되는 한국사회에서 보수=우파=부유층 대 진보=좌파=노동자 혹은 서민층이라는 도식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유층은 더 이상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노동자들과 서민층은 경쟁이나 자신의 이해관계를 강하게 요구하기 어려워진다.

한국사회에서 진보와 보수의 단순 구도는 노동자들의 모습도 모순적으로 만든다. 노동조합의 양대 산맥 중 민주노총의 지도부는 1980년대 노동자대투쟁의 전통을 계승하는 조직으로서 좌파적 특징을 가진다. 그들이 1999년 마침내 합법적 단체로 인정받고 한국 노총과 경쟁하는 과정에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특히 대기업노동자들은 정치적으로는 좌파인 반면 경제적으로는 보수적이고 기득권층이 되었다. 그들은 사내 하청업체의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하고 불안정한 고용현실을 외면하면서 높은 수준의 안정된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현실이 발생할 경우 그들에게 가해지는 피해는 파업이나 시위를 통해 정치적으로 회피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오히려 구조조정의 완충장치로 간주하여 외면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좌파로 분류되는 노동조합이 경제영역에서는 보수화되고 있다는 지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정치적 좌파와 경제적 보수화의 이중적 모습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는 방편으로 보수/진보의 이념을 동원한다는 점은 한국의 정치과잉화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안에 서명한 후 노조원들의 지도부 불신임이 투표로 결정되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된 민주노총지도부는 이후 대기업 현장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노동계 내부는 노동자 전체의 연대를 위한 방법론을 둘러싼 경쟁이 아니라 대기업 현장 노동자들의 자기이해 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계파 간 경쟁으로 분열되었다.<sup>60)</sup> 좌파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자기이해를 우선하는 노동자들은 그들의 이중성으로 인해 보수진영뿐만 아니라 중도층에게조차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진보진영이 보수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인 무책임이나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낙인은 이제 서로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리하여 좌파와 우파의 구분과는 무관하게 각자 정치적 집단주의의 모습을 띠게 되면서 소위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어떤 합의점도 찾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sup>61)</sup> 게다가 노동계 내부조차 경제적 이해관계가 우선되면서 소통이 사라지고 있고 따라서 계급정체성이나 노동자의 연대를 넘어서는 사회적

60) 김대환 외, 『노동운동, 상생인가 공멸인가』, 고양: 위즈덤하우스, 2010.

61) 유범상,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이념의 과잉과 소통의 빈곤』,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5.

연대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제가 되었다.<sup>62)</sup>

경제영역에서 기업가를 중심으로 하는 상류층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조직이 서로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각자 자신이 양보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경제영역에서의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대립은 상류층이든 노동자층이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그리하여 기업도 노조도 유연한 사고를 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동자의 연대에 기초하여 독일과 같은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구상 가능성도 열리겠지만 현재 한국의 노동조직의 현실에서는 요원한 일이다. 경제영역에서 기업가의 기술혁신이나 조직혁신의 진보적 모습이 보수집단 내의 이념과잉으로 협소해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정규직 일자리와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려는 대기업 현장 노동자의 보수적 모습이 진보집단 내의 정치과잉화로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sup>63)</sup> 서로를 비난하는 양 집단이 상호이해하려는 의지가 부재한 상태에서 거버넌스와 같은 대안들은 단순히 이론적이고 수사적인 차원에 머무르게 되고 그 결과 한국사회는 전 세계적 산업구조변동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미래의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치에서 시작된 보수와 진보의 대결과 갈등이 경제영역을 거쳐 앞으로 살펴볼 환경문제, 특히 탈원전문제에 이르러서는 더욱 강화되는 실정에서 이런 경향은 더욱 명확해진다.

### 3) 환경문제를 이념화하는 보수와 진보의 논쟁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서구에서 환경문제는 좌와 우의 대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주제이다. 환경문제는 이념적 대립과는 무관하게 모두에게 위협을 가져다준다는 차원에서 서로의 타협과 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환경문제 특히 탈원전 논쟁은 이념적 대결로 인식된다. 사실 서구의, 위에서 주로 다뤘던 독일의 탈원전문제가 사회의 다원화 정도와 사회의 소통정도를 보여주는 반면, 한국사회에서는 소수의 환경운동가에 의해 비판될 뿐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그러나 탈원전의 의제가 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으로 등장하였고 한국사회의 공론장은 갑자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으로 뜨거워졌다. 임기 5년의 단임제 대통령제의 대선공약으로 나온 정책이 설익은 상태

62) 유형근, 『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 울산 대공장 노동자의 생애와 노동운동』, 부산: 산지니, 2022, p.184.

63) 이항우, 『보수의 이념과잉, 진보의 정치빈곤: 한국 사회정치 담론 구조와 전략(2000~2015)』, 청주: 충북대학교 출판부, 2016.

에서 공론장에 등장한 것이다. 아직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역할이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공론장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하여 언론은 탈원전이 가져올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각도로 전달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기 위한 합리적 논의를 진행했어야 했다. 사실 탈원전 문제는 다양한 요소들이 매우 복잡적으로 얽혀있어서 쉽게 합의에 이르기 힘든 주제이다. 무엇보다 대표적으로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담론,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 탈원전의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한수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정서적 반감 등의 문제가 복잡적으로 엉켜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에서는 언론들, 특히 보수를 대변하는 조선일보와 진보를 지향하는 한겨레신문에 의해 탈원전정책은 이념적 주제가 되었다.

김지수·권상희<sup>64)</sup>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특정 프레임과 정보원 활용을 토대로 보수 신문이(은) 부정적 편향을, 진보 신문은 긍정적 편향을 드러내며 갈등을 더욱 정쟁화’하고 있음을 연구를 통해 밝혔다. 원전과 같은 과학기술의 전문분야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중립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언론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파악한 개인들은 자율적으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상호타협할 수 있는 최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언론은 자신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정보원 혹은 취재원을 선별하여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을 자신들의 노선에 동조하도록 부추겼다. 여기에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여론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당시 야당 소속 정책연구소였던 바른미래 연구원<sup>65)</sup>은 2019년 1월 시행된 탈원전 정책 관련 인식 조사에서 반대 응답이 51.6%, 찬성 응답이 41.5%로 나온 결과를 발표하였다. 반면 현대경제연구원<sup>66)</sup>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찬성 84.6%로 국민 대다수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원전에 대한 국민의 부족한 정보와 지식수준은 정권교체와 함께 대통령의 정책 의지에 따라 급변하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sup>67)</sup> 양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언론들이 근대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을 진보와 보수의 단순한 구도로 몰아 대립하면서 한국

64) 김지수·권상희, “사회적 갈등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 연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34권 2호, 한국방송학회, 2020, p.39.

65) 위의 논문, p.7에서 재인용.

66) 장우석 외,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공요건: 원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VIP Report』 통권 726, 현대경제연구원, 2018, pp.1-14.

67) 박진우·박민수, “뉴스 콘텐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파 언론의 프레임 연구: 정부의 원전 정책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 콘텐츠 학회논문지』 24권 2호,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3, pp.385-397.

사회에서는 환경문제, 특히 탈원전 의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의 아니게 국민은 정부 혹은 정당들과 언론의 의도에 따라 보수와 진보의 진영 싸움에 동원되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 4) 민족의식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뒤바뀐 주장

북한과의 관계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민족개념은 한국사회를 이념적 갈등으로 몰아넣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다. <그림 1>에서 언급했듯이 전통적으로 서구의 우파진영은 민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좌파는 민족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민족개념의 서구적 의미는 전도된다. 과거 피식민지의 경험을 했던 한반도에서 우파진영이 민족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반면 좌파 진영은 상대적으로 매우 강한 민족주의적 경향을 보였다. 한국사회의 불행은 해방 이후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주체적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정부를 구성할 수 없었던 것에서 시작된다. 미군정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부역했던 인물들을 중용하면서 민족문제에 천착했던 좌파 진영은 일본 제국주의와 미국을 동일시 하였다. 이런 도식은 정부수립 이후 국내 정치 상황에 이식되었다. 일제 식민지 시대 미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였지만, 국내에 정치적 기반이 없었던 이승만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친일세력과 정략적인 타협을 하면서 반민특위를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민족문제는 우파세력이 한동안 회피하는 주제였다.<sup>68)</sup>

민족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우파에 비해 좌파는 해방 이후 민족문제에 적극적이었다. 특히 사회주의의 가치를 내걸고 북쪽에서 집권한 김일성은 제국주의와 민족문제를 연결시켜 친일세력을 철저히 청산하였다. 남쪽의 좌파들도 북한의 과거 청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다. 그러나 민족문제를 선점했던 남쪽 좌파의 영향력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였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좌파 인사들의 월북과 조봉암에 대한 이승만의 정치보복이 이어지면서 좌파세력은 남한에서 공식적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우파세력에 의해 그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1960년 5·16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대통령은 부족한 헌법적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국정운영의 기본원칙으로서 반공주의 및 발전주의와 함께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sup>69)</sup> 앞서 언급했듯이 민족의식의 고취는 국민 모두를 통합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민족개념은 국가 구성원의 자각에 기초한 통합이라면 민

68) 홍건석, “이승만과 반민특위”, 『영남정치학회보』 통권 6집, 영남정치학회, 1996, pp. 5-37.

69) 이봉규, “박정희 정권기 역사 교육학계의 민족정체성 인식과 국가교육 강화”, 『역사문제연구』 21권 1호, 역사문제연구소, 2017, pp.13-53.

주주의와 연결될 수 있지만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주입이 되면 독재를 위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정희 정부에서 민족주의는 후자의 성격이 강했다. 그는 점차 국민 교육현장을 통해 민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권력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지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민족주의적 지향은 권력자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 본인의 개인사적 행로에 근본적인 모순이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만주국 일본 장교 출신 전력과 남로당 가입 행적이라는 박정희의 개인사적 양면성은 민족주의와 반공주의를 동시에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70년에 접어들면서 한국사회에 민족주의보다 점차 국가주의(statism) 혹은 애국심(patriotism)이 더 자주 등장한 이유였다. 이런 현상은 1972년 유신헌법이 반포되고 시행되면서 더욱 명확해졌고 민족국가(nation state)의 조합에서 민족주의(nationalism)가 국가주의(statism)에 포섭되어 나타난 결과였다. 박정희 정권은 소위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앞세워 국가주의적 애국심이라는 배타적이고 강요된 타율적인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였다.<sup>70)</sup> 그리하여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를 연상시키는 민족이나 통일은 점차 사람들의 입에 쉽게 오르내릴 수 없는 단어가 되었다.

민족개념은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민주화세력에 의해 복원되었고 그들에게 주도권이 넘겨졌다. 반헌법적인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이 광주의 저항을 군대를 통해 진압했을 때 그것을 방조한 미국을 한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외세로 인식한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이 민족문제를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재야세력과 좌파 대학생들은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부류와 민족투쟁을 우선하는 부류로 나뉘면서 격렬한 논쟁을 하였고 그 결과 수많은 정파로 분열되는 결과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1990년을 전후하여 몰락한 사회주의국가의 현실, 특히 북한의 현실을 알게 되면서 재야세력은 급격하게 약해졌고 내부 분열이 발생하였다. 민족의식을 강조하던 세력들 중 북한의 인권문제에 비판적 인식을 가진 인물들이 국민의 힘의 전신에 합류하였다면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에 방점을 둔 인물들은 대거 더불어 민주당의 전신에 참여하였다.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들 인사들에 의해 그동안 수구의 이미지가 강했던 당시 여당은 보수로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었던 반면 야당은 우파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북한과의 평화나 화해를 강조하면서 진보의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의 이미지는 항상 유동적이다. 국민의 힘이 일제강점기시대 및 박정희 시대와 단절하지 못하는 한 수구로 공격되고 민주당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상대 당으로

70) 구경남, “1970년대 국정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애국심 교육과 국가주의”, 『역사교육연구』 통권 19집, 한국역사교육학회, 2014, p.351.

부터 친북으로 공격의 빌미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한국사회에 민족문제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논쟁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그리하여 시민사회에서도 북한을 대상으로 인권문제를 주장하면 보수=수구=친미 혹은 친일=반민족의 낙인을 찍게 되고 북한과의 평화를 강조하면 진보=좌파=친북=빨갱이라는 원색적인 공격이 가해지면서 서로 간의 대화나 타협의 가능성을 닫아버렸고 그런 적대관계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 5)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결로 내몰린 한국의 페미니즘

오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남성중심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페미니즘은 좌와 우의 경계를 벗어나 다양한 유형의 스펙트럼을 가진다.<sup>71)</sup> 전통적으로 자본주의를 지지해온 우파가 페미니즘에 대해 가지는 반감과 마찬가지로 좌파들이 페미니즘에 가지는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좌파의 입장에서 자본주의사회에서 가부장제도는 필연적이고 여성운동은 그 구조의 한 부분을 차지할 뿐인 상황에서 중산층 여성들의 페미니즘은 역겹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72)</sup> 여성문제를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해석하는 좌파와 우파와는 달리 그동안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살았던 여성들의 자기 목소리는 이념을 넘어서서 정체성과 인권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의 기본정신을 내포하고 자연스럽게 진보적인 특성을 가진다.

과거의 엄격한 성차별에서부터 시작된 성불평등은 점차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분업으로 변형되어 이어졌다. 남성 중심의 견고한 기득권 구조에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고정관념과 편견이 결합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서구 페미니즘운동은 이런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의 역사였다. 가족의 개념이 해체되기 시작한 1980년을 전후로 페미니즘운동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들의 활동영역을 넓혀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무엇보다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가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여전히 강고한 남성 기득권 구조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정치계, 경제계, 학계, 교육계 등 다양한 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때마침 한국사회에서도 민주화 이후 그동안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던 여성들의 억눌린 목소리를 수용하기 위한 페미니즘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2001년 김대중 정부가 여성부를 출범시킨 것은 이런 국제사회와 시대의 흐름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이었다. 차기 노무현 정부는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하여 국가가 주도하는 여성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아

71) 주디스 로버 지음, 최은정 외 옮김, 『젠더 불평등: 페미니즘 이론과 정책』, 서울: 일신사, 2005.

72)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한국사회 일상의 성정치학』, 서울: 교양인, 2020, p.148과 비교.

직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여성정책은 시민사회의 충돌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은 오랜 유교문화적 전통을 가진 한국사회에서 남성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성 감별로 인한 남아선호사상이 1980년대 사회문제로 언급되다가 자녀교육이 갈수록 재정적으로 그리고 사회환경적으로 어렵게 되면서 1990년대 말부터 남아선호에 집착은 줄어들지만 성별과 관계없이 자녀를 동등하게 양육하는 가족의 가치관이 형성되었다.<sup>73)</sup> 그러나 여성들이 점차 자신의 미래를 폭넓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남성의 인식이 함께 포괄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다. 기혼 남성의 경우 집안에서 ‘딸바보 아빠’라는 주변의 평가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집 안팎에서 여전히 가부장적인 모습을 탈피하지는 못하였다. 남성들은 가정 내에서 가장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과 가정 밖에서는 남성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과의 경쟁에서 낙오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았다. 미혼 남성의 경우는 더욱 여성과의 경쟁이 부담스러워졌다. 어릴 때부터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또한 가져야 하는 당위로 교육받은 또래 여성과의 관계에서 젊은 남성들이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오히려 역차별적 대우나 역차별적 정책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면서 여성과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남성에 의해 여성과의 동등한 대우를 반대하는 안티페미니스트 백래시현상까지 나타났다.<sup>74)</sup>

기존의 남성중심사회가 만들어 놓은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청소년 혹은 청년 남성들이 막연하게 역차별을 느낄 수 있지만 여성차별이나 남성의 역차별에 대한 논쟁은 보수와 진보의 구별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대화와 상호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한국사회에는 자신들의 역차별을 호소하는 남성들의 여성혐오가 공론장에 나타났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남성들의 집단적 정서로 나타난 여성혐오는 온라인에서의 언어폭력 수준을 넘어서서 오프라인에서의 여성에 대한 물리적 테러로까지 확산되었다. 그들의 여성혐오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전체 페미니즘에 대한 막연한 반감뿐만 아니라 개별 여성에 대한 증오로까지 표출되었다.<sup>75)</sup> 도쿄 올림픽의 양궁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여자선수가 페미니즘의 상징인 짧은 머리를 했다는 이유로 악성댓글로 공격받은 사건은 한국의 이런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sup>76)</sup> 여기에 일부 여

73) 송승영, 『한국 가족과 젠더: 페미니즘의 정치학과 젠더 질서의 재편성』, 파주: 집문당, 2011.

74) 신경아, 『백래시 정치: 안티페미니즘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 파주: 동녘, 2023.

75) 윤보라 외, 『여성혐오가 어땠다구?: 별거벗은 말들의 세계』, 서울: 현실문화연구, 2015.

76) “한국은 왜? BBC, 여성 짧은 머리·집계손가락 논란 조명”, 『연합뉴스』 2021년 8월 10일.

성들도 맞불을 놓았다. 인터넷 사이트에 남성을 혐오하는 글들을 게재하고 남성중심 사회에 대한 증오에 가까운 도발적 행위를 영상으로 올린 것이다. 이처럼 보수와 진보의 이념과는 무관하게 여성과 남성의 감정적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대하는 바람직한 모습은 대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상호이해를 통해 접점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그런 노력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논란은 엉뚱한 곳으로 번졌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두고 논쟁하였다. 보수를 대표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진보를 상징하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이 논쟁에 뛰어들면서 페미니즘을 둘러싼 논쟁은 이념논쟁 혹은 정쟁의 대상이 되었다.<sup>77)</sup> 보수를 표방하는 신문들은 페미니즘을 둘러싼 성별 간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추겼다는 논리를 내세웠다.<sup>78)</sup> 나아가 양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맹공격하였다. 반면 진보성향의 신문들은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책임감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sup>79)</sup> 결국 정치과잉화된 언론을 통해 여성문제는 기존의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대립관계로 재현되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한 채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2021년 국민의 힘 당 대표 선거에서 청년 남성을 정치적 전략으로 활용한 이준석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후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의 불화를 수습하는 과정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1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여성혐오와 그것에 기반한 청년 남성의 동원전략은 최정점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남성으로부터 지지를 끌어내려는 보수 성향의 정당과 그 정당에 이념적으로 동조하는 언론들 그리고 여성의 높은 지지를 기대하는 진보성향의 정당과 그 정당에 우호적인 언론 사이의 정쟁 속에서 페미니스트들은 정치 이념적 갈등에 휩쓸리게 되었다. 그 결과 여성들조차 다양한 스펙트럼의 페미니즘들 사이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타협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다. 시민사회의 페미니스트들이 기존의 보수와 진보의 단순한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양당 내 여성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각 정당의 정치공학에 끌려가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77) 정사강·홍지아, “국가 페미니즘, 여성가족부, 여성혐오”, 『미디어, 젠더 & 문화』 34권 1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9, pp.209-253.

78) 위의 논문, p.232.

79) 위의 논문, p.239.

## IV. 나오며

근대문화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개인주의에 기반하는 근대사회에서 중층갈등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여러 사회현상들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과거처럼 종교나 특히 정치에 의해 단순하게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층갈등의 양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구사회와 명확한 차이가 발견된다. 서구사회 특히 유럽사회에서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근대사회의 특징에 따라 다원화된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68운동 이후 좌와 우로 대립하였던 정치투쟁이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요구하는 문화운동으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영역들로 분화된 ‘신사회운동’이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1980년대 이후 등장한 개인화 현상은 사회의 다원화의 특징을 더욱 강화시켰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먼저 정치는 (중도)좌파와 (중도)우파 사이에 녹색당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정당이 등장하면서 정당들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하지만 그들은 경쟁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한다. 특히 현실 사회주의국가가 몰락한 이후 이념적 대립이 약해지면서 기존의 이념적 대립을 벗어난 새로운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다음으로 정치와 분리된 경제영역에서도 기업가들이나 자본가들은 역사적으로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자신의 기득권만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들은 초기 자본주의의 노동윤리에서부터 복지윤리와 생태윤리를 거쳐 사회적책임윤리로 변화하는 과정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노동자들도 산업의 구조변동에서 개인과 조직의 생존을 우선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들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런 점에서 진보와 보수의 단순한 구분으로는 경제영역의 복잡한 관계가 설명되지 않는다.

민족개념도 유럽에서 사회적 갈등의 수위를 높이는 요소이다. 세계화와 함께 약해질 것으로 전망되었던 민족의식은 냉전체제의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중동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의 난민유입은 사회통합을 위협하고 우파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개별 국가는 민족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고 유럽연합의 틀에서 조정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찾고 있다. 민족문제가 극우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지만 중도우파와 중도좌파 혹은 녹색당은 극단적인 대결과 갈등을 극복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작용하는 환경문제는 좌와 우의 경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대안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하는 주제이다. 마찬가지로 이념적 대립을 넘어서서 다양한 관점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페미니즘운동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합의점을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나타나는 영역

이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내부 논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영역은 이념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각 영역이 내부적으로 합의를 찾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sup>80)</sup>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유럽사회와 비교하면 한국사회에서는 다원화된 사회의 특징이 제대로 발현되고 있지 못하는 상태다.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인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정치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들도 정치과잉화로 만들고 있다. 학계의 연구도 그런 현실 세계의 대립구도에 따라 사회적 갈등의 원인과 과정을 추적한다. 하지만 갈수록 복잡하고 불확실해지는 근대사회에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접근 방식은 다른 영역들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무엇보다 정치영역에 과도한 관심과 과몰입하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하면서 한국사회의 담론을 단순하게 만들고 결국 사회갈등에 실질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치영역에서부터 간략하게 정리하면 좌파의 정치세력화가 역사적으로 단절된 한국의 정치영역에서 우파와 좌파의 구분이 보수와 진보의 구분으로 대체되었다. 게다가 정치세력화를 회복한 후에도 좌파로 분류되는 정당들,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의 경우 자신들의 강령이나 정책의 목표를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로 구체화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내부적으로 합의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사회주의를 공공연하게 밝히기에는 국민 다수의 부정적 인식이 높기 때문이다. 좌파 정당이 명확한 정치적 세계관을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대 정당인 국민의 힘이나 더불어 민주당은 우파의 특징을 가지면서 한쪽은 산업화세력을 다른 한쪽은 민주화세력을 앞세워 격렬한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진보와 보수의 단순한 구분에서 시작하다 보니 소위 진보진영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보수=우파=반민족주의자=친일(친미)=여성혐오=친원전=현실주의자로 몰아붙인다. 반면 보수로 규정된 세력은 그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진보=좌파=빨갱이=친북=남성혐오=탈원전=이상주의자로 규정하고 공격한다. 이런 서로 간의 낙인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은 묻혀거나 둘 사이의 대립에서 벗어나 제3의 길을 찾는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로 배척된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상대에 대한 공격이 갈수록 정치공학에 의존하게 되면서 내부의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고 극성 지지층에 의존하는 펜던트 정치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대 양당의 비민주적 절차는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정치의 위기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80) Mayntz, Renate and Fritz W. Scharpf, *Gesellschaftliche Selbstregelung und politische Steuerung*, Frankfurt a.M.: Campus Verlag, 1995.

본 연구는 지금까지 무의미하고 시대착오적인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대화와 타협이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부작용은 매우 다양하고 심각하다: 한편으로는 정치과잉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혐오, 제도와 규범에 대한 불신, 타인과의 소통단절, 공론장의 기능상실 등. 따라서 한국사회가 지금까지의 정치와 경제의 발전 위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라는 상투적인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담론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 사회의 각 영역에서 개인들이 자유롭게 각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사회에 대한 비판정신을 키우는 것은 한국사회의 선결 과제이면서 근대사회의 기본정신을 되살리는 일이다. 이것은 근대의 기본정신이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 한국사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향한 올바른 궤도에 진입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 이런 제안은 커다란 난관에 봉착한다. 과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후속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에 근대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없었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자들의 다양한 유형들의 특징을 추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보수와 진보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한국사회에 대한 근원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진단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원택·조홍식, 『하나의 유럽: 유럽연합의 역사와 정책』, 서울: 푸른길, 2009.
- 강준만, “강남좌파: ‘엘리트 순환’의 수호신인가?” 『인물과 사상』 2006년 5월호 통권 97, pp.81-92.
- 강준만, 『강남좌파: 민주화 이후의 엘리트주의』,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11.
- 구경남, “1970년대 국정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애국심 교육과 국가주의”, 『역사교육연구』 통권 19집, 한국역사교육학회, 2014, pp.347-383.
- 권용립, “한국의 ‘보수’: 개념의 궤적과 역사적 특징”, 『담론 201』 16권 4호, 한국역사사회학회, 2013, pp.97-119.
- 김금수, 『세계노동운동사 1』, 서울: 후마니타스, 2013.
- 김대환·최영기·윤기설, 『노동운동, 상생인가 공멸인가』, 고양: 위즈덤하우스, 2013.
- 김수진, “군부 권위주의 시대의 야당과 신민당”, 류상영·김삼웅·심지연(편저), 『김대중과 한국 야당사』,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pp. 57-104.
- 김승아·김면희, “이슬람혐오증과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의 선거전략: 2017년 총선과 2019년 주의회 선거를 중심으로”, 『EU연구』 통권 62집,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2, pp.155-186.
- 김용민, “한국정치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 김세균(편), 『한국정치의 보수와 진보』, 서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5, pp.21-28.
- 김지수·권상희, “사회적 갈등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 연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글 중심으로”,

- 『한국방송학보』 34권 2호, 한국방송학회, 2020, pp.5-43.
- 나베-헤르츠 로제마리 지음, 이광숙 옮김, 『독일 여성운동사』, 성남: 지혜로, 2006.
- 도널드 서순 지음, 강주현 외 옮김, 『사회주의 100년 : 20세기 서유럽좌파 정당의 흥망성쇠』, 서울: 황소걸음, 2014.
- 류상영, “김대중과 1971년 대통령 선거”, 류상영·김삼웅·심지연(편저). 『김대중과 한국 야당사』,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pp. 143-170.
- 박명준, “독일의 노동조합간 경쟁: 양상과 논점”, 『국제노동브리프』 9권 5호, 한국노동연구원, 2011, pp.48-55.
- 박진우·박민수, “뉴스 콘텐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파 언론의 프레이밍 연구: 정부의 원전 정책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 콘텐츠 학회논문지』 24권 2호,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3, pp. 385-397.
- 베네딕트 앤더슨 지음,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 2002.
- 보 구스타프손 지음, 홍성방 옮김, 『마르크스주의와 수정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의 비판과 그 이념사적 전제』, 서울: 새남, 1996.
- 복거일, “한국의 보수를 논한다”, 박효종 외. 『한국의 보수를 논한다: 보수주의자의 보수 비판』, 서울: 바오, 2005, pp.63-76.
- 서두원, “신사회운동의 제도화와 민주주의의 발전”, 권태환·임현진·송호근(공편), 『신사회운동의 사회학: 세계적 추세와 한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1, pp. 371-406.
- 세이무어 마틴 립셋 지음, 문지영·강정인·하상복·이지운 옮김, 『미국 예외주의: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가』, 서울: 후마니타스, 2006.
- 송승영, 『한국 가족과 젠더: 페미니즘의 정치학과 젠더 질서의 재편성』, 과주: 집문당, 2011.
- 신경아, 『백래시 정치: 안티페미니즘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 과주: 동녘, 2023.
- 심지연, 『한국정당정치사: 위기와 통합의 정치』, 서울: 백산서당, 2004.
- 심지연, “한국 정통 야당의 기원과 성격”, 류상영·김삼웅·심지연(편저), 『김대중과 한국 야당사』,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pp.21-56.
- 알렉산더 타바록 지음, 서은경 옮김, “낙태와 자유”, 웬디 맥엘로이(편), 『여성과 자유: 21세기의 자유와 페미니즘』, 과주: 나남, 2006, pp.233-269.
- 알렉산더 페트리נג 외 지음, 조혜경 옮김,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과주: 한울, 2012.
- 앨런 스콧 지음, 이복수 옮김, 『이데올로기와 신사회운동』, 서울: 한울, 1995.
- 엄광희, 『잘가라, 원자력: 독일 탈핵 이야기』, 과주: 한울아카데미, 2012.
- 요제프 슈페터 지음, 이종인 옮김,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서귀포: 북길드, 2016.
- 울리히 벡 지음, 홍성태 옮김,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 1997.
- 위르겐 하버마스 지음, 장춘익 옮김, 『의사소통행위론 2: 기능주의적 이성비판을 위하여』, 과주: 나남, 2017.
- 유범상,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이념의 과잉과 소통의 빈곤』,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유형근, 2022. 『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 울산 대공장 노동자의 생애와 노동운동』. 부산: 산지니.
- 윤보라·임옥희·정희진·시우·루인·나라, 『여성혐오가 어땠다구?: 별거벗은 말들의 세계』, 서울: 현실문화연구, 2015.

- 이규영·김경미, “체제전환 이후 동유럽 극우주의의 발흥과 극우정당의 발전에 대한 연구”, 『유럽연구』 30권 1호, 한국유럽학회, 2012, pp.43-71.
- 이나미, 『한국의 보수와 수구』, 서울: 지성사, 2011.
- 이봉규, “박정희 정권기 역사 교육학계의 민족주체성 인식과 국사교육 강화”, 『역사문제연구』 21권 1호, 역사문제연구소, 2017, pp.13-53.
- 이상호, 『독일의 일자리 혁명』,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 이성재, 『68운동』, 서울: 책세상, 2009.
- 이세희, 『프랑스 대혁명과 여성·여성운동: 페미니즘의 파란만장한 드라마』, 서울: 탐복스, 2012.
- 이승협,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역할 : 자율주의를 넘어 제도화로”, 『산업노동연구』 18권 1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012, pp.207-242.
- 이정현, “미국 이증임금제를 통해 본 노조 연대와 집단이기주의의 문제”, 『국제지역연구』 22권 3호, 국제지역학회, 2018, pp.221-251.
- 이항우, 『보수의 이념과잉 진보의 정치빈곤: 한국 사회정치 담론 구조와 전략(2000~2015)』, 청주: 충북대학교 출판부, 2016.
- 임혁백, 『시장, 국가, 민주주의: 한국민주화와 정치경제이론』, 서울: 나남, 1994.
- 장미경, 『오늘의 페미니즘, 세계 여성운동』, 서울: 문원, 1996.
- 장석준, 『사회주의』, 서울: 책세상, 2013.
- 장승진, “보수적이지 않은 보수주의자와 진보적이지 않은 진보주의자: 이념성향, 정책선호, 그리고 가치 지향”, 『한국정당학회보』 19권 1호, 한국정당학회, 2020, pp.129-156.
- 장우석·이장균·이진하,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공 요건: 원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VIP Report』 통권 726집, 한국경제연구원, 2018, pp.1-14.
- 정명기, “독일 노사관계 변화에 대한 쟁점들”, 『경상논총』 34권 1호, 한독경상학회 2016, pp.21-41.
- 정병기, “한국 시민사회의 양극화와 다양화”, 박성우 외(편저), 『한국시민사회의 양극화와 다양화. 양분법을 넘어서: 극단의 시대와 정치외교학』,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pp. 248-276.
- 정사강·홍지아, “국가 페미니즘, 여성가족부, 여성혐오”, 『미디어, 젠더 & 문화』 34권 1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9, pp.209-253.
-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한국사회 일상의 성정치학』, 서울: 교양인, 2020.
- 조안나 윌리엄스 지음, 유나영 옮김, 『페미니즘은 전쟁이 아니다』, 고양: 별글, 2019.
- 조지 레이코프 지음, 유나영 옮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진보와 보수, 문제는 프레임이다』, 서울: 와이즈베리, 2015.
- 주디스 로버 지음, 최은정·임소희·임혜련·정광숙 옮김, 『젠더 불평등: 페미니즘 이론가 정책』, 서울: 일신사, 2005.
- 주섭일, 『사회민주주의의 길: 서구 좌·우파의 실용주의』, 서울: 사회와연대, 2006.
- 최영태, 『베른슈타인의 민주적 사회주의론: 수정주의 논쟁과 독일사회민주당』,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7.
- 카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지음, 이진우 옮김, 『공산당 선언』, 서울: 책세상, 2018.
- 폴린 크라우치 지음, 이한 옮김, 『포스트 민주주의: 민주주의 시대의 종말』, 서울: 미지북스, 2008.
- 토마스 험프리 마셜·토마스 버턴 모트모어 지음, 조성은 옮김, 『시민권』, 서울: 나눔의 집, 2014.
- 피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下』, 서울: 새물결, 2005.

한스-울리히 벨러, 이용일 옮김, 『허구의 민족주의』, 서울: 푸른역사, 2007.  
홍건석, “이승만과 반민특위”, 『영남정치학회보』통권 6집, 영남정치학회, 1996, pp.5-37.

“좌파도 좌파답게”, 『국민일보』, 2005년 10월 14일.  
“한국은 왜? BBC, 여성 짧은 머리·집게손가락 논란 조명”, 『연합뉴스』, 2021년 8월 10일.  
“독, 남은 원자력 발전소 3기 폐쇄...60여년 원전에 마침표”, 『파이낸셜뉴스』, 2023년 6월 16일.  
“첫 ‘극우 정당 시장’ 배출에 독일 긴장... ‘민주주의 위기’ 우려”, 『한국일보』, 2023년 6월 27일.

Inglehart, Ronald,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97.  
Mayntz, Renate and Fritz W. Scharpf, *Gesellschaftliche Selbstregulung und politische Steuerung*, Frankfurt a.M.: Campus Verlag, 1995.  
Meyer, Thomas and Michael Müller, “Individualismus und neue soziale Bewegungen”, *Leviathan*, Vol 17, no 3, 1989, pp. 357-369.  
Rucht, Dieter, “Neue Konflikte und neue soziale Bewegungen in Deutschland”, Brigitte Grande, Edgar Grande, and Udo Hahn eds., *Zivilgesellschaf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fbrüche, Umbrüche*, Ausblicke, Bielefeld: transcript Verlag, 2021, pp.61-77.

【 Abstract 】

**Correlation between Progressive/Conservative Debate  
and Social Conflict in Korea: A Study on Transformation from  
a Over-politicized Conflict Society to a Pluralistic Society**

TaeKeon Kim · Young Ran Lee

Modern societies inherently contain various sources of conflict, but ideological conflicts in Western countries have been weakening since globalization. However, ideological conflicts in Korean society are intensifying. This study traces the background behind this divergence. In European societies, politics historically evolved separately from other domains, with politics being divided into left and right ideologies. Through competition, compromise, and cooperation, politics were able to reduce ideological differences. The welfare state and the 1968 movement further solidified this phenomenon, allowing for diverse solutions to be explored in various domains independent of politics. In contrast, in Korean society,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factions within the right-wing confront each other politically, impeding free discussions in other domains. In other words, the phenomenon of over-politicization on one side and political aversion on the other side is emerging. This study argues that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first and foremost, to move away from the distinction between progressivism and conservatism and to separate politics from other domains. Furthermore, it emphasizes the establishment of modern consciousness, including individual self-reflection and a sense of criticism.

**Key Words** : Progressive/Conservative Debate, Social Conflict, Over-Politicization, Pluralistic Society, Modernity.

---

• 논문투고일 : 2023년 10월 31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3년 11월 13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11월 13일

